



이 우 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

농민 시위의 배경을 생각한다

지난 2월 13일 열린 여의도 농민시위에 대한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와 대통령의 충격적인 강경조치 지시로 인하여 이 시위에 대한 원인과 본질의 규명과 해결책의 모색보다는 농민들을 처벌하려는데만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는 한, 농민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며, 문제해결에 접근함이 없이 무한한 싸움의 평행선만 달릴 것으로 예견된다.

이번 농민들의 시위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만 이번 시위가 종전의 시위와 달랐던 것은 학생들의 참여로 화염병이 날았고 차량과 일부 가건물에 대한 방화가 좀 과격하게 보였던 것 뿐이다. 지난해 가을, 경북에서 있었던 몇번에 걸친 농민시위도 매우 격렬했으며, 앞서 있었던 여의도 시위에서도 잔디밭에의 방화와 88년초 낙농육우인들의 정부 종합청사에서의 유리창 파손 등도 놀랄려면 놀랄 수 있는 시위였다. 그러나 몇차례 이런 시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조금도 농민의 요구와 주장에 귀를 기울

이지 않았다.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의 충격을 계기로 정부당국은 깊이 반성해야 하며, 농정의 대전환의 계기를 찾아야 한다. 그럴려면 이번 농민시위의 원인이 여러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잘못을 시정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번 농민시위의 원인은 경제정책 및 농업정책의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분석되어야 한다. 오늘 한국의 농업·농민문제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매년 하락되는 식량자급률과 농업기피현상은 물론, 날로 증대되는 농가부채의 증가는 농촌의 동공화(洞空化)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런 현상은 근본적으로 8.15직후 미영여농산물에 기생하였던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5.16 군사 구테타이후 추진된 1·2·3·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전략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외자의존 수출주도형의 저노임, 저농산물가격정책은 이 나라 농업을 구조적으로 파

괴시켰다. 이런 토대위에 5공화국은 저곡가정책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복합영농·영농후계자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비교우위에 의한 수입개방정책으로 급격히 농가경제를 파탄시켰다. 특히 축산농가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었다. 이런 과정에서 모든 농민은 농업의 파탄과 농가의 파멸이 전적으로 반농민적인 농업정책과 경제정책에 있다는 것을 상세히 인식하게 이르렀다. 이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이 줄기차게 일어났으나 농민들의 이러한 주장과 요구를 반정부 불순세력으로 몰아부쳤고, 관료주의적 권위와 물리적 탄압으로 대처했을 뿐이다. 6.29선언이후 농민들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정치인들에 의하여 공약된 농업정책에 기대했으나, 선거가 끝난후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된 바가 없고, 오히려 계속하여 축산물을 비롯한 농산물의 수입은 더욱 확대되게 되었다. 선거과정에서 정치인들에 의하여 주장된 부채탕감, 농축산물수입억제, 농협민주화, 농촌의료보험 문제의 해결, 수세경감 등의 약속은 어느것 하나 제대로 추진되어진 것이 없어 농민들의 불만은 또다시 축적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88년 3~4차례 걸쳐 여의도에서 농민시위가 있었으나, 역시 정책당국과 정치인들은 성의있는 태도를 보인 바 없이 농민들의 요구와 주장을 적당히 무마·지연·기피하거나 호도하는 미봉책으로 농민을 기만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정책당국자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이른 것이다.

때문에 오늘 농민들의 분노는 오랜 연원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여의도 농민시위는 농민들의 불만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다. 앞으로 계속 이런 농업정책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농민시위는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더이상 어쩔 수 없는 생존권의 투쟁이다. 고추재배지역에서는 고추밖에 심을 수 없다. 다른 대체작물이 없다.

그러니까 고추판매문제에 필사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 한국농업에서 한작물에서의 피해는 다른 작물로 연쇄적인 파급을 가져와 전반적인 파멸로 결과된다.

정부는 이 기회에 농업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은 농민빈곤화정책이며 농민추방정책이다. 영세농의 탈락을 통하여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전업농 및 기업농으로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농의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촌공업화를 추진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취업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정책기조는 필연적으로 영세소농을 일차적으로 탈락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당국은 처음부터 농업포기정책을 선언하고 이농 및 탈농시킬 농민을 선정하여 전업시켜야 한다. 마치 농업·농민을 위한 정책을 하는 척 하며 농민에게 기대를 주어 이에 속은 농민은 극한상황에 까지 몰려 파멸의 구렁텅이에까지 몰려서 도시빈민으로 전락되게 되었다. 이런 기만을 처음부터 해서는 안된다. 불을 보듯 뻔한 자기 운명을 보고 누가 가만히 있었는가.

식량자급은 국가의 주권과 관계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이 안보적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의 추세이다. 그리고 경제를 사람위주로 봐야한다. 효율과 성장만을 생각하고 경제주체인 인간을 경제효율의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경제효율만 생각하여 대재벌이 기른다면 농민은 무엇을 해먹고 살란 말인가.

축산을 명목으로 비농업용대토지 소유로 부정 축재를 허용하는 농업정책을 보고 파멸위기에 직면한 농민이 참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이제 당국은 더이상 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지 말고 사고의 대전환을 할 때이다. 그럴려면 농민의 참여에 의한 농업정책을 수립할 때만이 이 위기상황을 면할 것이다. 늦기전에 사고의 대전환을 하기 바란다. 